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협력

김성철 편

제5장

동북아 IT협력과 한국의 전략

김삼배

- I. 머리말
- II. 동북아 IT협력의 구상
- III. 동북아 IT협력의 현실
- IV. 동북아 IT협력의 전략
- V. 맺음말

동북아 IT협력과 한국의 전략

김상배(서울대학교)

I. 머리말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 교역량의 약 3분의 1,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1,200km 안에 7억 인구나 6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재기를 노리는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 중간에 위치한 통일한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북아의 급속한 부상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요소로서 인식된다. 1990년대 말 이래 정책서클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딜레마 상황은 소위 '호두 깎기(nut-cracker)'의 사이에 낀 호두에 비유되어 왔다. 현재 동북아 주변국가들(특히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10-2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에서 그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한국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태까지 한국의 대응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으며 새로운 도약을 통한 생존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국은 기업경영이나 생활 인프라 면에서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여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뒤져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발간된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서울은 5개 도시 (홍콩·싱가포르·상하이·동경 포함) 중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더욱이 국가 이미지, 노동의 유연성, 영어 구사, 외국인 사업 환경, 취업, 생활여건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국제 및 지역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산업·기술 역량의 증대, 구조조정의 추진, 제도적 여건의 정비 등을 통해서 향후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비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비전의 이면에는 동아시아 지역번영을 위한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이라는 동북아시아 비전과 함께 조만간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IT 또는 과학기술 분야 등과 같이 동북아 국가 간 상호이익이 증척되는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제는 당초 물류,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위주에서 IT개발 및 산업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북아 IT협력론' 또는 '동북아 IT허브론'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변동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동북아 IT협력론의 문제제기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 자체가 미래 국가전략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북아 IT협력의 구상은 새로운 공간 활용의 구상으로서의 '동북아'의 제

기, 21세기 국가전략의 아이템으로서 'IT'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주변 국가들과 형성할 '협력체'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IT협력의 구상은 그 개념적 미성숙뿐만 아니라 전략추진의 목표나 주체 등과 관련된 담론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향후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동북아 IT협력론에 포함된 정책구상들을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IT협력의 구상을 검토함으로써 2020년을 향한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정책서클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동북아 IT협력 구상의 내용을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IT구상이 던지고 있는 담론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 IT협력 구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IT협력의 현실에 비추어 그 현황과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전될 변화의 시나리오와 그 와중에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IT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시급하게 인식해야 할 전략적 기본 방향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요약·종합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II. 동북아 IT협력의 구상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역내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구상의 단초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역내 국가 간의 정책적 협조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국가 간의 협조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지대한 관심으로 가지고 ASEAN+3 등을 통해서 각종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론 또는 동북아 IT허브론(최근에는 동북아 IT협력 공동체론) 등으로 대변되는 전략구상이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서부터 정부차원에서 준비되어 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각 부처별로 모색되어 왔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론이 전체 정부차원에서 구상되고 입안되었다면, 동북아 IT허브론은 실무 부처로서의 정보통신부가 주도하여 준비하여 왔는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에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산하 경제협력전문위원회에서 그 비전을 다듬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2-3여년의 역사를 지닌 동북아 IT구상을 소개하는 제대로 된 공식문건이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동북아 IT구상을 소개하는 목차 정도만이 올라와 있고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단편적인 보고서들을 통해서 그 구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지난 2-3년 동안 출현한 문건 중에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동북아 IT협력 관련 전략구상을 골라보면, 1) 2002년 4월에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에 담긴 동북아 IT허브 관련 구상, 2) 2002년 7월에 정부 각 부처의 동북아 구상을 담아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담긴 동북아 IT허브 관련 구상, 3) 2002년 6월에 한·일 월드컵 이후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아시아 IT허브국가 발전전략”의 구상, 4)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동북아 IT허브 관련 구상으로서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산하 경제협력전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동북아의 IT/과

학기술분야 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문건은 한국에서 동북아 IT협력 구상이 성장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첫째, 최근 논의되는 동북아 IT협력 구상의 기원은, 2001년 3월 기초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2년 4월 17일 확정된 제3차 정보화기본계획인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 “Cyber Korea 21”로 알려진 제2차 정보화기본계획과 비교하여 e-Korea 2006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제5장)”라는 제목 하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IT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e-Korea 2006이 담고 있는 동북아 IT협력 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i) 아시아 국가들의 TEIN사업 참여 확대 및 APII 테스트베드 사업 참여를 주도하여 아시아·유럽 간 초고속 정보통신 허브로 도약, ii) IT 분야의 R&D 협력 및 단계적 무관세화 추진 등을 통해 동북아 IT경제협력체제 구축, iii) 동북아 CDMA 연대를 통한 세계시장 주도 및 이동통신 관련 기술협력, iv) 동북아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v)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적 장치의 공동마련, vi) 동북아 정보문화 협력체제 구축, vii) 동북아 정보문화 교류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부가 주도한 e-Korea 2006과는 다른 맥락에서 동북아 IT협력 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2002년 4월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 2002년 7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5개의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세부시행계획은 i) 물류 중심지화, ii) 비즈니스 거점 지역의 개발, iii)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 iv)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v)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IT협력과 관련된 iii)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의 항목 내에 a) 외국 IT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IT인재 양성, b)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로 발전, c) 국내 IT·디지털 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및 디지털 콘텐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d) 문화콘텐츠산업과 디지털산업의 접목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기능의 통합·이전을 통해 동북아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추구 등과 같은 네 가지 실천전략이 담겨 있다.

셋째,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적인 수준의 IT인프라의 확산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IT허브 국가건설의 구상은 200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구체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는 사례 중의 하나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정보통신부에서 마련된 “아시아 IT허브국가 발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다. “아시아 IT허브국가 발전전략”은 i) 혁신적 IT클러스터 구축과 ii) 아시아지역 IT부문 연계협력의 두 가지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혁신적 IT클러스터 구축’은 고부가가치의 IT 핵심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선진기술과 산업을 국내로 유인하고 흡수하는 ‘구심력의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로서 i) 세계최고의 IT인프라 구축, ii)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기반 구축, iii) 고부가 지식정보산업 육성, iv) 고부가 IT R&D 및 산업의 중심국가, v) IT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 IT부문 연계협력’은 역내의 개도국을 한국의 생산체제로 편입시키는 ‘원심력의 전략’이며 동시에 역할분담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로서 i) 역내국가와의 IT분업체계 구축, ii) 국내 IT업체의 해외진출 강화, iii) IT 교류협력의 강화, iv) 아시아의 네트워크 중심국가로 발전, v) 아시아의 인터넷 거버넌스 중심국가로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노무현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구상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IT 관련 내용으로 동북아 IT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20Mbps) 구축과 동북아 IT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과제를 선정 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최근 동북아시아위원회 산하 경제협력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동북아의 IT/과학기술분야 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이라는 제하에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IT협력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 i) 대륙과 해양을 잇는 통합과 협력의 새 질서를 창출하는 가교국가의 역할, ii) 아이디어의 중심이자 역내 네트워크의 거점국가의 역할, iii)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내 협력의 촉매국가의 역할을 발휘하는 맥락에서 동북아 국제연구망 협력, 동북아 IT통상협력, 동북아 공개 S/W협력 등의 세부협력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3년 여간 진행되어온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전략구상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다소 단편적이고 중복적으로 정부 각 부처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감이 없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 한국이 상정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은 거의 망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추진과제들이 상정하고 있는 정책적 담론들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혹 상호 모순되는 담론들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정부의 동북아 IT협력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총체적인 21세기 국가전략의 그랜드 디자인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조율의 과정이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 IT협력 구상이 담고 있는 정책담론의 기본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후의 논지 전개를 위해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상에서 살펴본 동북아 IT협력 구상의 담론적 성격을 i) 지향하는 목표의 설정과 IT라는 대상 설정을 둘러싼 문제, ii) IT전략 추진의 이념과 주체를 둘러싼 문제 iii) 주변 이해당사국들과의 관계 또는 역할 설정을 둘러싼 문제, iv) 동북아시아라는 활동공간의 설정을 둘러싼 문제 등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이후 동북아 IT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으려고 한다.

첫째,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IT협력의 구상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근대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하여 물질적 권력 자원용 강조하는 부국강병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21세기 판(版) 부국강병 담론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동북아 IT협력 또는 IT허브 담론은 이전의 소위 IT강국론이 국제적 세태에 놓여 지면서 생긴 개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터넷강국', 'IT부국', '정보화대국', '글로벌리더 e-Korea', '전자정부 선진국', 'e-비즈니스 중심국가', 'e-비즈니스 강국', '업그레이드 e-코리아'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 IT협력 구상이 상정하고 있는 IT는 다분히 기술·경제·산업 중심의 평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IT산업, R&D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다층위와 다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IT 중에서 2-3개의 층위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제도와 규범에 대한 강조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경제와 산업 발상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와 규범의 정비를 논하는 식의 접근이다. 이러한 IT에 대한 '하드웨어적' 발상은 물리적인 통신망으로서의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에서 한국이 이룩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수단으로 하여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통신망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IT에 대한 이해는 산업화시대의 '제조업 기반'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연장하는 수준에 놓여 지며,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권력 자원으로서의 IT의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다.

둘째, 동북아 IT협력 구상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성장기 소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산업정책 담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사실 여태까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정보화의 비전과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정보화'의 형태가 발견된다. 물론 정보화 과정에서 국가나 기업 및 기타

정보화 주체들이 정보화에 부합하는 제도 환경의 창출을 위한 조정의 노력을 보이긴 하였지만 대체로 산업화시기에 채택되었던 제도적 대응의 패턴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정보화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화시대의 정책이 그러하였듯이 차세대의 비전으로 동북아 IT협력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최근 각 부처 간의 증첩과 혼란을 넘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논의의 기저에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 경제중심 또는 IT허브와 관련하여 재경부, 정통부, 산자부, 문화부 등이 모두 비슷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정보통신부가 IT부문 위주로 중심 국가 구현전략을 추진한다면, 산업자원부는 전자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에 대해 각각 중심국가로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부처이기주의와 정책의 비효율적 증첩을 넘어서는 추진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북아 IT협력의 복표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드라이브하려는 발상의 한계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동북아 IT협력 구상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한 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증진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주의적 또는 중상주의적인 입장에서 2차원적 중심(center)을 추구하는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허브(hub)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동북아 IT담론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2차원적 중심과 3차원적 허브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 결국 동북아 IT담론은 영토성의 관념을 바탕으로 개념화된 구상이며 평면적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둔 중심-주변의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IT구상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중심론의 논의가 IT와 네트워크의 영역에 오면서 허브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허브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의미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는 허

브에 대한 용어만 있지 네트워크상에서의 다양한 노드와 허브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발상의 잠재적 문제점은 제로섬게임의 사고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자기가 중심 또는 허브라고 나서는데 남이 중심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누가 주변의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려고 하겠는가? 실제로 한국보다도 한발 앞서 중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 등이 이미 동북아 허브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단순히 외국인투자 유치 수준을 넘어 '외국투자촉진중심'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상하이 푸둥 지구를 1990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래 국제 중심지로 육성 중이다. 일본도 1998년에 '오키나와 멀티미디어 특구'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2002년부터 일본주도의 국제 인터넷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시장형성을 위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계획'을 구상하여 현재 구체화 작업 중이다. 싱가포르도 2000년 '인포콤(Infocomm) 21' 계획을 수립하여 통신시장 완전자유화, 콘텐츠산업 육성, IT집적단지 조성·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1996년부터 국가정보화와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 계획'을 추진해 이미 오라클·노키아·에릭슨 등 200여개의 글로벌기업을 유치했다. 홍콩도 1998년 '디지털21 IT전략'을 수립하여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사이버포트 조성, IT인력 양성, 전자정부 구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동북아 IT협력이 상정하는 공간 구상은 '닫힌 동북아'의 구상이다. 동북아 담론의 제시는 일단 한반도에만 국한되었던 공간의 발상이나 한·미관계, 한·일관계 등과 같은 1차원적이고 관계적인 공간 발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넘어서 이웃나라들을 둘러보는 21세기의 새로운 공간구상의 발로라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근접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한·중·일의 동북아를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 국가전략, 그것도 글로벌 차원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IT전략의 공간으로서 동북아를 설

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짚 동북아의 공간적 틀에 중국과 일본이 선뜻 동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실 한국의 동북아론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이 짚 동북아의 일 요소가 되려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중국의 화이론(華夷論) 발상의 연속성에서 중국 자신의 일부로서 동북아를 품으려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이 자신들의 동아시아 구상의 틀 속에서 한국의 동북아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한국과 중국 간의, 또는 동북아의 이해구조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구상은 동아시아를 닫고 일어서서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와 겨루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마도 한·중·일(또는 북한이 포함됨) 닫힌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가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객체로서 설정되고 있다. 동남아 화교권의 역동성이나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구상에서 등장하는 동남아의 적극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동북아의 협소한 틀 안으로 한정하는 느낌을 준다.

요컨대 지난 2-3년 여간 형성되어온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구상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21세기 초반을 해쳐 나갈 전략구상으로서의 한계도 안고 있다. 각각의 추진과제들이 상정하고 있는 담론들이 19세기나 20세기의 옛 시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내다보는 구상으로서의 동북아 IT협력 구축의 전략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2020년 한국의 국가전략을 염두에 둘 때 동북아 IT협력의 구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실현의 가능성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최근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IT협력의 현실과 그 변화의 전망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III. 동북아 IT협력의 현실

동북아 IT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동북아 각국이 IT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현실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분야 동북아 지역협력의 현황을 각 세부 분야별로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동북아에서 IT협력의 가능성과 장애요인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중·일 3국간의 IT협력은 아직 공동선언이나 협력의향서 교환, 시범사업이나 특별협력 개발사업의 실시 등 아직 정부 간 협력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실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협력의제가 확대·구체화되어 차세대 인터넷과 4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핵심 의제의 중심축이 이행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을 세계 IT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적 하에 3국간 IT정책, 기술, 표준 공조 강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 등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IT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11월의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양국 간의 관계에서만 진행되어오던 IT협력이 중국의 제안으로 한·중·일 3국을 모두 포괄하는 틀로 확대되어 한·중·일 IT국장급 회의 및 IT장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 이후 3차례의 한·중·일 IT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초기의 '동아시아문화권에 대응한 정보통신 연구개발협력' 등과 같은 추상적인 IT협력 단계에서 벗어나 차세대 이동통신협력 등 구체적인 IT협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공개 소프트웨어, 유비쿼터스 등 7개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정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IT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2004년 7월에 열린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한·중·일 IT장관회의를 상설협의체인 동아시아 IT정상회의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IT협력의 제도화 및 공동체 구축의 기반이 확

보되었다. 이 글에서는 i) 지식 인프라, ii) 지식 자원, iii) 지식 규범 등의 세 층위별로 동북아 IT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지식 인프라 층위에서 발견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된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상이 출현하여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동북아 IT허브론이 상정하는 한·중·일 차원의 IT네트워크의 구상 이외에도 최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ABN(Asia Broadband Network) 구상, APEC 차원에서 상정되는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EM의 공간구상으로 연결되는 TEIN(Trans-Eurasian Information Network), 시베리아 지역의 정보통신망, 이밖에도 ASEAN+3 등을 배경으로 한 네트워크 구상도 발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상의 구상들이 상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기보다는 각기 단편적인 발상에 의거해서 출현하였으며,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동북아 차원의 국제연구망의 대륙 간 연결 현황을 보면, 동북아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북미와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현재 아태지역과 북미지역은 6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약 10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국제연구망 용량에 근접해 있다. 일본은 40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되어 있고, 동남아 국가인 태국과 10Gbps급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러시아·중국·한국을 잇는 10Gbps급의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망인 글로리아드(GLORIAD)로 연결 예정이다. 대만은 4.5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하여 북미·유럽과 기가급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요컨대, 아·태지역과 미주 및 구미 지역으로의 연결은 주로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대용량의 국제연구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APEC, ASEM 등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 사업으로 국제연구망인 APII 테스트베드와 TEIN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확대 발전

시켜 왔으나,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 국제연구망을 구축하기가 예산 및 인력 면에서 역부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연구망의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동북아 국제연구망 백본이 요구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과학연구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일 간 APII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연구 및 정책적인 논의가 한·일 간 APII 연례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한·중 간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IT지원 정책에 힘입어 중·일 간에 IPv6망 등 첨단연구망 관련 협력이 여러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과의 협의 및 정보전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트래픽 측정, IPv6, 기상, 원격의료, 고에너지 물리실험, 핵융합 등 여러 분야에서 3국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지식 자원 층위에서 발견되는 IT산업 관련 R&D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IT산업 분야에서 기술능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 모두 IT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 국가 간 밀접한 IT협력체제 구축은 자국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IT협력은 철도, 운송, 에너지 등에 비해 정치·안보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문이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이 추진되기 용이한 측면도 존재한다. 게다가 IT분야의 경우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한국의 중간기술과 테스트베드 환경, 중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 등 한·중·일 3국이 상호보완적인 비교우위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IT협력을 통해 증대되는 이익이 동북아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회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세부 분야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이다. 특히 컴퓨

터 운영체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항하여 등장한 대안적 운영체제로서의 리눅스(Linux)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들어 기존에는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리눅스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최근의 사례는 2004년 4월 3일 중국의 베이징, 7월 27일 일본의 삿포로, 12월 2일의 한국의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공개 소프트웨어 포럼'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관계부처 국장급을 대표로 하여 벌이고 있는 협의체인데 동아시아를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술개발태스트, 인력양성, 표준화연구 등의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협력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동아시아에서 리눅스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담론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나서서 지역차원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IT분야 기술표준화 분야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가입자회선(xDSL), 무선인터넷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표준화의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표준경쟁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제4세대(4G)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화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이동통신 사용 인구는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3국이 선택한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G에서 3국이 통신방식을 표준화한다면 통신회사나 단말기 메이커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표준도 노릴 수 있다. 3국은 삼자 협력을 통해 통신방식 표준화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해결에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회의에서 4G 휴대전화 보급의 관건이 될 주파수대역 설정에 있어서도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살

리는 다국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체계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자코드 컴퓨터처리 등에 대한 동아시아 3국 협력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분야에서 IPv6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의 미래와 관련하여 RFID/USN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이 2004년 7월 제 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밖에도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이 구성하는 동아시아의 실리콘 벨트(Silicon Belt)의 구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글로벌 IT기업들의 R&D센터를 동북아 국가들의 가국에 유치하려는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정보화의 꽃은 단연코 콘텐츠이며, 그러한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언어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적 유사성은 중요한 IT 관련 협력의 자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 중심 콘텐츠의 획일화 경향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를 포함하는 다국어로 문화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의 의미 있는 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의 한자 검색과 국제 한자 정보 DB구축의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를 반영하는 각종 인터넷 콘텐츠의 공동개발의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TV와 방송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도 부상하고 있다.

끝으로, 지식 관련 규범과 문화 층위에서 지역협력을 조율하는 IT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차원의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제도적 조율과 관련하여 미국 주도의 지적재산권 국제레짐이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독자적 지적재산권 관리체제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부분인데, 동북아 국가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내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마련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다. 또한 IT통상정책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기술표준의 조화, 상호인증협정의 추진,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 IT통상정책의 공조협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IT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국제규범의 형성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문제도 의미가 크다. 최근 UN 산하의 ITU가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는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준비과정을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 차이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ASEAN+3, APEC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하는 민간전문가들의 교류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동북아 IT협력과 관련하여 아직은 구상만이 난무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불밀모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협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현실의 진척에 비해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앞으로 15년 후인 2020년을 염두에 둘 때 동북아 차원에서의 IT협력은 현재 거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을 염두에 둔 향후 15년 내에 동북아 IT협력과 관련된 변수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여기서 파생되는 동북아 국가들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상의 동북아 IT협력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동북아 IT협력 구축 전략을 추진하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IT패권과 동아시아 IT협력의 관계설정,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는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IT패권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분야의

한·중·일 협력이나 유비쿼터스 분야의 경쟁과 협력의 양상, 비디오 게임 및 온라인 게임 산업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등은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게 될 동북아 IT협력이 글로벌 IT패권에 대한 대항진영으로서의 '동아시아'의 결집이나, 아니면 '글로벌'의 하위구조로서의 '동아시아'의 형성이나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동아시아의 독자적 IT패권의 가능성을 낳을 것인냐 아니면 글로벌 IT패권의 구도에 편입된 범위 내에서의 하위패권만을 의미하느냐의 문제이겠다.

만약에 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동북아 IT협력 구축에 임하는 각국은 글로벌 지식구조에 대항하는 행위자 차원의 지식전략을 마련하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글로벌 지식구조에 대하여 대항담론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현실화 또는 물질화(materialization)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미국을 일종의 허브(hub)로 하는 글로벌 IT패권의 제국 네트워크에 대항하여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대항진영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경우 글로벌 패권으로부터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견제로는 동북아 지역의 독자표준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일 반도체 분쟁이나 일본의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을 이루는 트론(TRON)의 사례에서 미루어 보건대 미국은 WTO의 국제레짐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와중에 발생하는 동아시아 내의 IT패권경쟁, 특히 중·일간 경쟁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 것인냐의 문제이다. 즉 중국 또는 일본이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큰 동아시아 지식구조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냐의 문제이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 IT협력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IT산업 육성 및 대외협력의 기본 정책방향은 '무역과 기술의 결합'으로 요약되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대가로 일정한 수

준의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침체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IT비즈니스, 특히 이동통신의 해외 진출(특히, 중국 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소위 한국형 정보화모델을 확산시킴으로서 '글로벌 IT리더'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록 외부견제와 내부 장애, 대외여건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한·중·일 3국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IT협력의 비전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동북아 3국이 추구하는 IT협력의 방향은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초 협력의 전제조건인 중국의 거대시장, 일본의 기술력, 한국의 테스트베드 환경 간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구미 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라는 전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변할 경우 한·중·일 IT산업의 비교우위구조는 협력보다는 경쟁의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 주도의 중화경제권으로의 이행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제나 불협화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화로의 전환이라는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과정에서 중국의 진출을 지나치게 견제하거나 특히 중국과 일본이 상호 경쟁할 경우 동아시아 질서에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향후에도 한·중·일 3국간 상호보완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협력과 경쟁을 적절한 형태로 복합한 제도적인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장 핵심적인 난제 중의 하나는 동북아 IT협력에 임하는 행위자인 각국 차원에서 안고 있는 불안정의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각국에 잔존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지역 차원의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국민적 반응이나 영토관할권을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이 각 국민들의 감정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

국의 국제적 외교행태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제도가 지니고 있는 후진성의 문제도 원활한 동북아 IT협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동북아 차원에서의 IT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결여되어 있는 링크는 다름 아닌 북한 문제이다. 북한이 현재와 같이 계속 고립되거나 소외될 경우 동아시아 IT협력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IT 분야에 많은 관심을 내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IT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에 비해 한국의 동북아 IT협력 구상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에는 남북한의 IT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는 남북한 IT교류협력의 문제가 정책서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위주의 관료적 발상에 의해 최종적인 조율의 단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동북아 IT협력론은 결국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요컨대, 동북아 IT협력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구상차원이거나 시범사업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이 시작된 경우도 정부차원에서 시동을 건 차원으로 민간사업자들이나 시민사회 차원의 견고한 협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동북아 IT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의 견제나 역내 차원에서의 경쟁, 그리고 각국 차원의 갈등 요인 등과 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동북아 국가들의 특성과 관심사로 미루어 보건대, IT 각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IT협력 자체는 추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동북아 IT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반영시킬 것인가는 문제이다.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

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IV. 동북아 IT협력의 전략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등장한 IT협력의 구상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앞서 펼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북아 IT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앞서 분석한 동북아 IT협력 담론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탐색작업의 일환으로서 i) 부강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설정된 IT의 이미지를 넘어서 지식국가의 구성요소로서의 IT론을 추구, ii) 발전국가 중심적인 추진주체의 설정을 넘어서 네트워크국가 모델의 모색, iii) 현실주의적이고 평면적인 중심론을 넘어서 탈 허브형 네트워크에서의 역할분담의 모색, iv) 닫힌 동북아 구상을 넘어서는 열린 공간 구상의 추구 등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기존의 부강(富強)국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된 경제적 이슈의 일부로서 IT를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IT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독자적인 지식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지식국가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목표이다. 또한 IT는 21세기의 실력(實力, hard power) 자원이자 매력(魅力, soft power)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우선적으로 기술·경제·산업 발달을 중심으로 설정된 IT의 상(像)을 다층위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영역 내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IT 관련 제조업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산업이나 IT 관련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

이며, 기술·경제·산업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정치외교의 발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기된 동북아 IT구상을 보면 이러한 논의들이 단편적으로는 모두 출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국가라는 그랜드 이미지를 틀로 하여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무엇보다 IT의 복합적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 관련요소들을 평면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총화된 방식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IT 관련 층위들을 단순하게 수평적·평면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서비스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 IT의 다층위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기존의 발전국가적 접근법을 넘어서는 발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향후 IT전략을 동북아에 투영하는 데에는 소위 탈(脫)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의 발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산업이나 기타 정보화의 분야에서 산업화시기의 발전국가 모델은 그 적실성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IT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도 네트워크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조정'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영미형의 조절국가(regulatory stat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의 기업의 역할, 연구기관 및 NGOs 등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정부 중심적 산업육성과 국제교류협력의 형태를 넘어서는 탈집중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 형태의 관리양식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체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나 국가에 대한 한국민의 문화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영미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버넌스형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기 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전국가 모델에 바탕을 둔 한국정부가 수행한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위 '한국형 정보화전략'이라는 말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한국에서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의 보급이나 CDMA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서 나타난 한국 정보화의 성공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결국 국내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국가의 발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이 지니는 장점을 흡수하는 방식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잠정적으로 이름을 부르자면 '발전형 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형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에는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정부-기업-시민사회의 네트워크, 국내의 네트워크의 유기적 연계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2차원적인 중심이나 현실주의적 허브의 발상을 넘어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역할분담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IT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네트워크는 허브형 네트워크의 형태를 넘어서 전방위형(all-channel)을 지향하는 탈 허브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띠고 있다.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의 3차원(또는 4차원)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네트워크상에서 허브는 그 자체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주변의 다른 노드(node)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 환경의 개념설정은 동북아 IT협력과 여기에서 담당하는 한국의 역할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 허브형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탈 허브형 네트워크에서는 결과적으로 노드 중심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크국가들 간의 다기능적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북아 IT 네트워크론에 담겨야 할 내용은 자기중심적 발상에 기초해서 한국만이 잘살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존공영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하는 공유의 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부강국가의 비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존공영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부국강병의 전략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공존공영의 답론을 품을 수 있는 조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역할

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산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동북아 IT협력론은 과거의 전략과 같이 수출을 증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방적인 전략의 형태를 벗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상호적인 전략의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구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업체계/네트워크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노드(value node)'를 담당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열린 동북아' 담론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매우 좁고 모호하게 설정된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의 개념을 재성찰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따로 떼어서 가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한가, 유리하다면 어떠한 동북아를 만들어야 하는가, 만약에 동북아라는 아이디어가 한국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소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개방되고 다층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공간 안에 동북아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동북아 공간의 상위와 하위에 존재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엮어서 한국의 활동공간을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현재 동북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공간은 여러 층위와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층위로서 남북한으로서 구성되는 한반도 공간, 좁은 의미의 동북아로서의 한·중·일 (북한, 대만 등도 포함 가능) 공간, '동북아 + 동남아'로서의 ASEAN+3 공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북남미와 호주 등을 포함하는 APEC 공간, ASEAN+3에 유럽을 포괄하는 ASEM 공간, 이상의 공간들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공간, 또한 현실공간을 넘어서는 사이버공간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향후의 동북아 IT협력 구상은 이들 공간 구상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위 죽(竹)의 세계경제(The Global Bamboo Economy)로 불리는 중화경제권의 공간, 일본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어 온 소위 '신(新) 대동아공영권'의 공간, 최근 급속히 주목의 대상으로서 떠오르는 미국-중국-인도 삼각협력의 공간이나 BRICs(Brazil, Russia, India, and China)가 창출하는 독특한 공간 등이 그 사례들이다. 요컨대, 이러한 다층적 공간 속에서 동북아 개념의 협소성을 넘어서 안과 밖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의 모색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이 글은 2020년을 대비하는 국가전략의 시각에서 동북아 IT협력의 구상과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동북아 IT협력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3년 간 정책서클을 중심으로 동북아 IT협력에 대한 구상이 준비되어 왔으며, 이는 1)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2002년 4월), 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2002년 7월), 3) 한·일 월드컵 이후 정보통신부의 전략구상(2002년 6월), 4)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동북아 IT협력 공동체론 등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동북아 IT협력 구상은 명목상으로는 협력과 좀 더 장기적으로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 기술·경제·산업 중심의 부국강병 담론, ii) 경제성장기에 기반을 둔 발전국가의 담론 iii) 정치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심의 담론, iv) 동북아에만 초점을 두는 '달린 공간'의 담론 등을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동북아 IT구상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대를 여는 협력의 구상이라기보다는 19세기나 20세기 옛 시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 여간 진행되어온 동북아 IT허브론에 대한 전

략구상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단편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총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에 입각하여 조율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동북아 IT협력론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북아가 되고 서 있는 현실과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및 IT협력 전략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중·일 3국간의 IT협력은 아직 공동선언이나 협력의향서 교환,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실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협력의 제가 확대·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 IT협력의 추진현황을 i) 지식 인프라, ii) 지식 자원, iii) 지식 규범 등의 세 층위별로 파악하였다. 앞으로 15년 후인 2020년을 염두에 둘 때 현재 동북아 차원에서의 IT협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동북아 지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협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은 특히 글로벌 IT패권과 동아시아 IT협력의 관계설정 문제, 동북아에서 발생할 지역패권 경쟁의 문제, 동북아 각국 차원의 국내적 불안정 요인 등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등장한 IT협력의 구상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동북아 IT협력의 전략이 지향할 방향으로서 i) 부강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설정된 IT의 이미지를 넘어서 지식 국가의 구성요소로서의 IT론을 추구, ii) 발전국가 중심적인 추진주체의 설정을 넘어서 네트워크국가 모델의 모색, iii) 현실주의적이고 평면적인 중심론을 넘어서 탈 허브형 네트워크에서의 역할분담의 모색, iv) 닫힌 동북아 구상을 넘어서는 열린 공간 구상의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동북아 IT협력 구상이 전략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1세기 글로벌 질서와 동북아의 현실을 반영한 총체적인 국가전략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조율의 과정이 거침으로서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배,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 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143-163
-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2004) pp.167-194
-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일본연구논총』 제17집, (2003), pp.75-101
- 김주훈,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나향렬,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분석," 『정보통신정책』 15(8), (2003), pp.20-41
-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35-56
- 백낙청(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서울: 창비, 2004)
- 야마무로 신이찌(山室信一), 『여럿이서 하나인 아시아』 (서울: 창비, 2003)
- 이대웅,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과 협력 가능성,"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95-522
- 이은민,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4(23), (2002), pp.1-20
- 장인성,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한국과 국제정치』 20(4), (2004, 겨울), pp.107-136
- 정보통신부,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
-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2004)
-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김대중(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pp.183-242
-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67-494
- Bernard, Mitchell and John Ravenhill,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January 1995), pp.171-209
- Borras, Michael,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Hatch, Walter, and Kozo Yamamura,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O' Riain, Sea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um, Ngai-Ling,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2003), pp.373-398
- Takahashi, Takuma and Fujio Namiki, "Three Attempts at 'de-Wintelization': Japan's TRON Project, the US Government's Suits against Wintel, and the Entry of Java and Linux," *Research Policy*, 32(9), (October 2003), pp.1589-1606